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62호 (2012-43) 발행일 : 2012. 11. 02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 틀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음. 세 차례(2009, 2010, 2011년)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를 보면, 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은 종사상 지위, 납부형태,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은퇴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늦추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소득수준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



윤석명 연구위원

1. 실질적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임
- 평균수명 증가,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불가피
-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외형적으로는 최저소득보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은 갖추었으나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자 등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여건이 좋은 사업장 종사자 위주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개인연금은 가입자 대다수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라는 문제가 있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조사 필요성 및 조사 개요

- 각 개인의 니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
-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된 개별제도의 가입현황 및 인식 등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천 가구를 추출하여 실시

2.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¹⁾

■ 국민연금 가입 실태

- 전체 가구주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2010년 89.8%, 2011년 91.8%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78.8%, 납부예외자는 20.4%, 체납자는 0.8%이며,
 - 사업장가입자는 55.4%, 지역가입자는 44.4%,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0.2%로 나타났음

〈표 1〉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및 납부형태(2011년) (단위: 명, %)

전체 3,106(100.0)	국민연금 가입자 2,852(91.8)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2,248(78.8)
			납부예외자	581(20.4)
			체납자	23(0.8)
		국민연금 가입종류	사업장가입자	1,580(55.4)
			지역가입자	1,266(44.4)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7(0.2)
		적용제외자	254(8.2)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10년 9.74년, 2011년 11.14년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2.81년, 납부예외자는 4.75년, 체납자는 8.49년이며,
 - 사업장가입자는 12.6년, 지역가입자는 9.33년,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6.71년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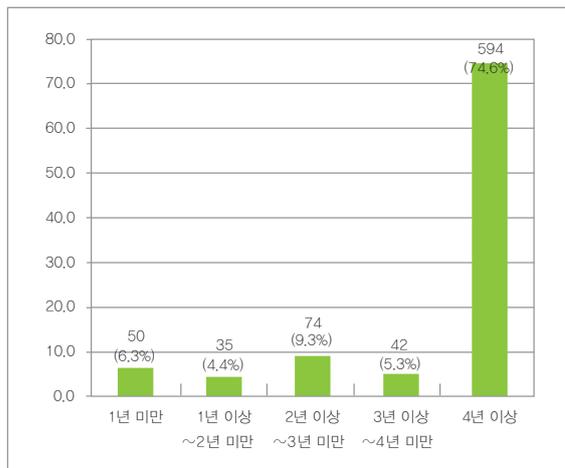
1) 본 조사결과는 2009년, 2010년, 2011년 가구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실태조사 결과임(자세한 내용은 윤석명 외(201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참고)

- 지난 1년간 월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 7.84만원, 2011년 9.1만원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1.2만원, 납부예외자는 0.9만원, 체납자는 10.19만원이며,
 - 사업장가입자는 11.2만원, 지역가입자는 6.47만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7.79만원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연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68.3%, '없다'라는 응답이 17%, '모름'이라는 응답이 14.7%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 61.6만원이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 35.1만원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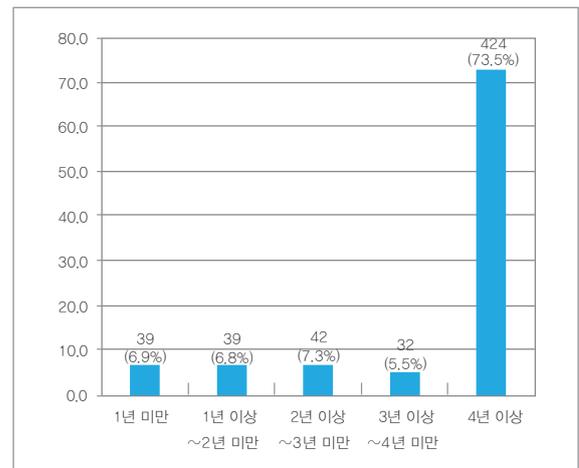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련 실태

- 실직, 소득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로 분류됨
- 일단 납부예외자가 되면 다시 납부자로 돌아오기가 어려움
 - 4년 이상 납부예외 기간인 경우가 2010년 74.6%, 2011년 73.5%로 납부예외 기간이 장기화

[그림 1] 납부예외 기간(2011년) (단위: 명, %)



[그림 2] 납부예외 기간(2012년) (단위: 명, %)



- 납부예외 기간 중에도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011년 기준 83%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86.2%가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주된 사유인 납부예외자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0.7%, 임시직의 24%, 일용직의 61.7%, 고용주의 5.1%, 자영업자의 24.7%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났음
-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납부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이 31%, 임시직 43.2%, 일용직 22.1%, 고용주 33.3%, 자영업자가 36.3%로 나타났음
 - 보험료 일부 지원시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이유로, 상용직과 고용주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반면,
 -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 국민연금 관련 인식

○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70.7%, 적용제외자의 85.1%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 국민연금 납부자의 72.7%, 납부예외자의 62.9%, 체납자의 65.2%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 사업장가입자의 71.3%, 지역가입자의 69.8%,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100%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음

〈표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조사연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2009	6.4	10.4	23.5	41.2	18.5
2010	2.9	13.9	18.0	58.9	6.3
2011	2.3	9.3	16.4	63.7	8.2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9%, ‘납부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3%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연금 수급의 확신’이 54.9%, ‘실질 가치 보장의 확신’이 21.9%로 나타났음

■ 퇴직연금 관련 실태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도 65%인 반면에, 가구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0년 10.7%, 2011년 8.3%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의 예상 월 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74.53만원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1%로 나타났음

■ 주택연금(역모기지) 관련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9.8%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적정가치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6.5%, ‘소유주택이 없음’이 27.5%,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17.3%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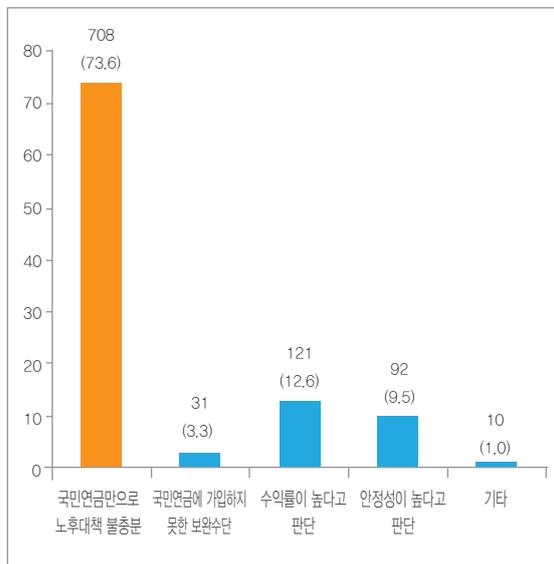
■ 개인연금 관련 실태

○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7.4%, 2010년 68.3%, 2011년 72%인 반면에, 가구주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은 2010년 31%, 2011년 31.3%로 나타났음

- 소득분위별 개인연금 가입률은 1분위는 12.5%, 2분위는 24.5%, 3분위는 28.5%, 4분위는 37.3%, 5분위는 52.8%로 나타났음
- 개인연금 가입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6%, ‘다른 노후소득 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입했다’라는 비율이 12.6%로 나타났음(2011년 기준)
- 2011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70.7%, ‘안정성·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12.1%로 나타났음(2011년 기준)
- 향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개인연금 월급여액은 2011년 기준으로 58.18만원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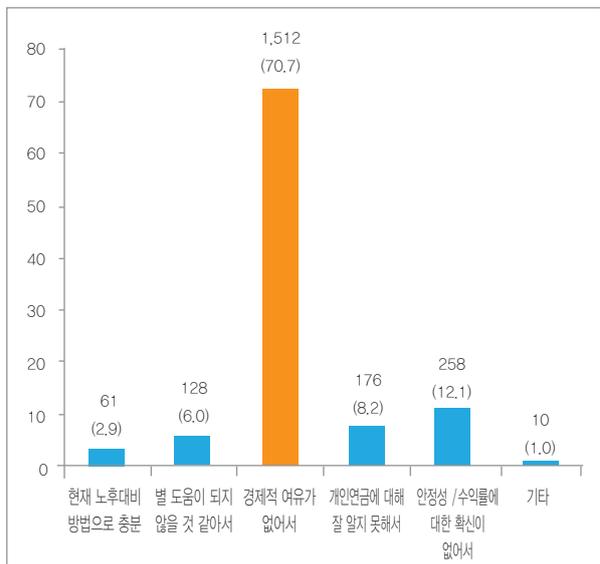
[그림 3] 가구주의 개인연금 가입이유

(단위: 명, %)



[그림 4] 현재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 노후준비 관련 인식

- 가구주 중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5%, 2011년 85.1%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90.9%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음
-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로는 ‘본인’ 및 ‘본인이 준비하고 국가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표 3>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

(단위: %)

조사연도	본인	본인준비, 자녀 및 가족 지원	본인준비, 국가 지원	자녀 및 가족 책임	국가책임	기타
2009	29.8	21.1	36.3	4.4	7.6	0.8
2010	45.2	4.1	43.8	0.8	6.1	0
2011	41.7	5.4	49.8	0.5	2.6	0

-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는 1인 기준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는 2009년 90.5만원, 2010년 112.4만원, 2011년 116.6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는 1인 기준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2009년 128만원, 2010년 175.1만원, 2011년 179.6만원으로 나타났음

〈표 4〉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단위: 만원)

조사연도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월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	
	본인기준	부부기준	본인기준	부부기준
2010	90.5	159.6	128.0	223.8
2011	112.4	177.3	175.1	272.3
2011	116.6	184.7	179.6	279.5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이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은 평균 11.86년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이 앞으로 계획하는 노후준비기간은 평균 15.11년으로 나타났음

〈표 5〉 가구주의 현재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2012년) (단위: 년)

구분		평균값	중위수	표준오차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13.24	12.92	0.13
	납부예외자	5.67	4.32	0.22
	체납자	9.56	9.57	1.23
전 체		11.86	11.50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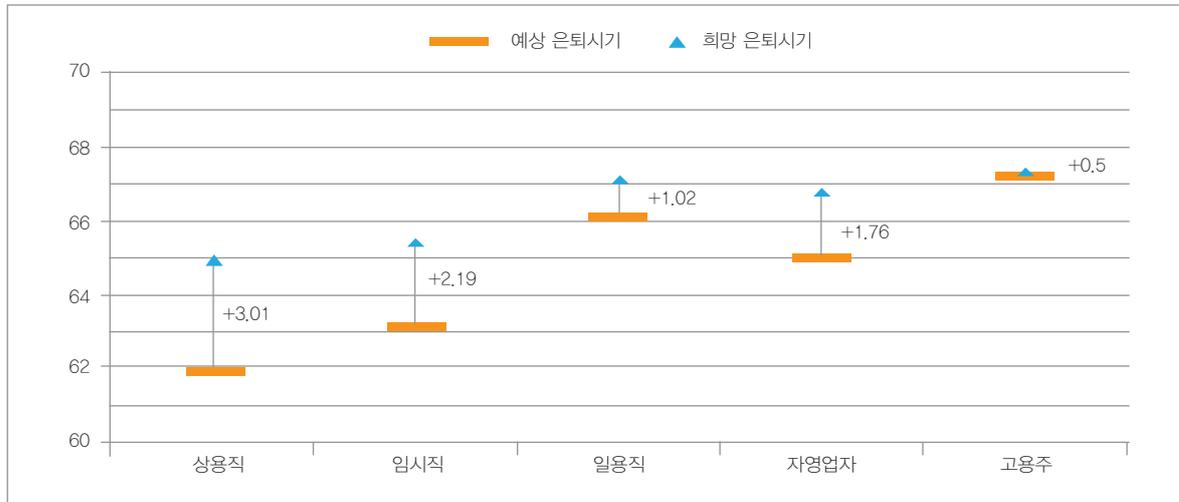
- 가구주 본인이 현재 노후준비에 사용한 월평균 금액은 2009년 17.4만원, 2010년 15.7만원, 2011년 21만원임

■ 은퇴시기 관련 인식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예상 은퇴시기에 대해 평균 63.7세로 응답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시기에 대해서는 평균 65.65세로 응답하였음
 - 예상 은퇴시기는 자영업자가 약 67세, 일용직이 약 66세로 비교적 늦었고, 상용직이 약 62세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는 상용직이 약 3년 정도 은퇴를 미루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음
 - 2011년 기준으로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가 다른 이유로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 조기퇴직 강요 때문이라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음

[그림 5]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

(단위: 세)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 베이비붐 세대내 소득분포는 1분위(25%)와 5분위(21.8%)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베이비붐 세대 중 81%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소득분위 1분위의 55.8%, 2분위의 76.2%, 3분위의 87.3%, 4분위의 94%, 5분위의 98.7%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별 노후준비 차이가 나타났음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13.52년으로 나타났음
 - 1분위 8.36년, 2분위 11.45년, 3분위 13.54년, 4분위 15.34년, 5분위 19.65년으로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기간의 차이가 나타났음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월 19.88만원으로 나타났음
 - 1분위 5.36만원, 2분위 10.66만원, 3분위 13.44만원, 4분위 19.99만원, 5분위 49.12만원으로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금액의 차이가 나타났음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종사상 지위, 납부형태, 소득수준, 연령 등에 따라 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은 아직 확고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후준비를 위한 정부지원의 소득수준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을 시사함
 - 정부의 지원이 취약계층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근로자 대상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와 집중적인 정책 타깃그룹 설정, 범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지원이 필요
 - 저소득 자영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적용이 필요
 - 현행 보험료 지원기준인 월 소득 35만원~125만원이 지원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한선의 하향 조정 및 상한선의 상향 조정(예: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필요
 - 사업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집단 위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예: 차차 상위 이상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확보한 소득집단 중심으로 제도 운용)
- 공적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근로기간 소득양극화가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퇴직연금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개인연금 활성화 노력 필요.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화된 개인연금 상품 도입이 필요(예: 독일의 Liester Pension)
- 예상은퇴시기와 실제은퇴시기의 차이(상용직의 경우 3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
 - 부분근로 및 부분연금 등을 이용한 점진적 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
- 생애노후설계 중요성 부각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연금포털) 구축이 필요
 - 스웨덴의 MinPension.se, 덴마크의 PensionsInfo를 참고한 한국형 포털시스템 구축이 필요

집필자 | 윤석명(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 02-380-8129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